

건, 정치 권한 등 4개 부문에서 국가별 성별 격차를 수치화해 분석하고 순위를 발표해 왔다.

2017년 한국의 성 격차 부문별 지수를 살펴보면 보건 부문에서는 84위, 정치 권한에서는 90위였으나 경제 참여·기회 부문에서는 121위, 교육성과 부문에서는 105위에 그쳤다. 한국은 경제 참여·기회 부문과 정치 권한 부문에서는 세계 평균을 넘기지 못했다.

특히 경제 참여·기회 부문에서 남녀 간 임금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업무 임금평등 항목에서 121위, 추정 근로소득(구매력 기준) 수준도 남성이 4만9천386달러(약 5천494만원)인 반면 여성은 그 절반 수준인 2만2천90달러(약 2천457만원)에 그치며 역시 121위로 하위권을 달렸다.

정치 권한 부문에서는 여성 최고 지도자 집권 기간 항목에서는 28위였으나 여성 각료의 비율은 115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교육성과 부문에서는 고교 졸업 후 3차 교육 평등도가 112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보건 부문에서는 건강 기대수명 평등은 세계 최고였지만 출생 시 남녀 성비 불균형이 132위로 최하위권이었다.

## ■ 청소년 실태조사…“결혼·출산 꼭 해야 하나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7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절반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결혼에 대해 반드시 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며, 결혼 후 아이를 꼭 가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종합실태조사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2017년도는 만9~24세 청소년 7천676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가치관 조사’와 통합해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는 응답이 전체의 49.1%를 차지했고, ‘결혼해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답한 이들도 46.1%나 됐다.

특히 여자 청소년의 경우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응답이 55.3%,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다는 응답이 49.8%를 각각 차지해 남자 청소년의 43.3%, 42.4%보다 결혼 및 출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직업을 선택할 때에는 수입보다 안정성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13~18세 청소년들의 직업선택 기준을 보면 5년 전과 마찬가지로 능력이 30.4%로 1위, 적성 20.6%로 2위를 차지했고, 안정성이 17.6%로 3위를 차지했다. 안정성을 꼽은 대답은 5년 전 5.5%보다 세 배가량 뛴 수치다. 장래성을 중시한다는 응답 역시 4.9%에서 11.3%로 늘어난 반면, 경제적 수입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14.0%에서 10.9%로 줄었다.

부모, 특히 아버지와의 거리감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 주중 매일 30분 이상 대화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41.1%에 그쳐 어머니와 30분 이상 대화하는 비율 72.2%보다 훨씬 낮았다. 부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기는 대학 졸업 전까지가 52%로 가장 많았고, 취업 전까지가 18.6%, 결혼 전까지가 5.7%로 그 뒤를 이었다.

최근 1년간 사교육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82.9%로 3년 전 73.6%보다 늘었으나 사교육을 받는 청소년들의 일주일

간 사교육 시간은 9시간 26분으로 3년 전(9시간 30분)보다 약간 줄었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 인권존중, 다양성 인정 등에 대한 청소년의 긍정적인 인식은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만 13~18세 청소년의 52.8%, 만 19~24세 청소년의 41%가 우리 사회는 대체로 공정한 사회로 인식한다고 답했다. 만 13~18세 청소년들의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5.5점으로 나타나 2008년 조사 이후 처음으로 5.0을 넘었다.

반면, 통일에 대한 인식은 낮아졌다. 만 13~18세 청소년 중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들은 58.9%로 5년 전 67.4%에 비해 줄었고,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도 5년 새 52.5%에서 40.9%로 낮아졌다.

## 소비자보호

### ■ 개요

2017년은 케미포비아(화학물질 공포증)와 푸드포비아(음식 공포증)로 소비자들이 불안에 떨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거진 ‘생리대 유해성 논란’은 3월 여성환경연대가 유해물질 방출 시험 결과를 발표하며 파장이 퍼졌다.

7월에는 고기 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됐다. 소비자들은 어떤 것을 믿고 먹거나 써야 하는지 혼란에 빠졌다.

### ■ 생리대 유해성 논란

생리대 유해성 논란은 2016년 온라인 커뮤니티에 ‘깨끗한 나라’의 ‘릴리안’ 제품을 사용한 뒤 생리 양이 줄거나 생리불순 등의 부작용을 겪었다는 사례가 연달아 게재되면서 시작됐다.

2017년 3월 여성환경연대는 강원대 생활환경연구실 김만구 교수 연구팀과 공동 조사한 결과, 국내 생리대 10종에서 유해



▲ 여성환경연대가 9월 5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리대의 모든 유해성분 규명 및 역학조사를 촉구하며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물질 22종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생리대 접착제 부분에서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라는 물질이었다.

여성환경연대는 업체나 제품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일부 언론에서 가장 많은 독성물질이 나온 제품이 릴리안이라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릴리안 생리대 불매운동이 벌어지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졌다.

여성환경연대는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뒤 건강 이상을 제보한 여성 3천9명의 사례를 분석해 발표했는데, 이 중 66%가 생리 주기에 변화가 있었다고 답했다. 제보자 중 85.8%는 생리 양이 줄었다고 답했고, 4.3%는 늘었다고 응답했다.

깨끗한나라는 한국소비자원에 안전성 테스트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한편 모든 릴리안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고 환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깨끗한나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소송 규모는 125억원, 원고는 4천600여 명에 달했다.

생리대 유해성 논란은 릴리안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으로도 퍼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성환경연대의 시험에 사용된 일회용 생리대 제품을 공개했는데 명단에는 깨끗한나라의 릴리안 외에 업계 1위 유한킴벌리와 2위 LG유니참, 한국P&G 등 유명 제조사의 주요 제품들이 포함됐다.

해당 업체들은 자사 제품이 "국내외 안전기준에 모두 부합된다"며 여성환경연대의 시험 결과를 반박했다. 깨끗한나라는 생리대 유해물질 방출시험을 진행한 강원대 김만구 교수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여러 논란이 이어지자 식약처는 생리대 전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고 밝히고 2014년 이후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등 666개 품목을 대상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출시험과 인체 위해 평가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생리대별로 검출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종류와 양에 차이가 있었지만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에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9월 28일, "국민이 사용하는 생리대 가운데 안전성 측면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없다."고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의 1차 발표에도 소비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생리대 관련 상담은 전년보다 58배 이상 급증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12월 28일 생리대 2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국내 생리대에 존재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74종에 대한 위해 평가를 시행한 결과, 검출량이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생리대의 휘발성유기화합물 검출량을 주기적으로 검사해서 공개하는 등 '생리대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생리대 유해성 논란과 함께 10월 17일 식약처 국감에서는 여성환경연대의 조사 대상 선정 과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중형 생리대 중 유한킴벌리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가장 많이 검출됐음에도 유독 릴리안 제품만 언론에 거론됐으며 여성환경연대와 유한킴벌리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여성환경연대는 유착과 시험 후론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본질인 생리대 안전성 문제에 집중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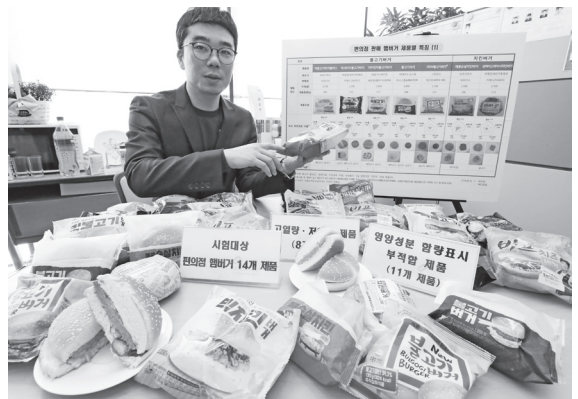
## ■ 맥도날드 '햄버거병' 논란

맥도날드에서 덜 익은 고기 패티를 먹은 어린이가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면 2017년 7월 피해자 가족이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식품안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고소했다.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장출혈성대장균의 일종인 O-157 대장균에 오염된 덜 익힌 고기나 채소 등을 먹었을 때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어린이는 2016년 9월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뒤 복통과 설사 증상을 보여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두 달 뒤 퇴원했지만 신장이 90% 가까이 손상돼 하루 10시간씩 복막투석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 최초 고소장 접수 이후 추가 고소가 이어져 유사사례 피해 어린이는 5명으로 늘어났다.

맥도날드는 "사건 당일 매장의 식품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도 거부했다. 하지만 '패티가 덜 익을 수 있다.'는 맥도날드 직원들의 증언이 나왔다. 전·현직 맥도날드 근무자들은 "일할 때 종종 덜 익은 패티가 나왔다."며 "체크리스트에 조리 상태가 정상으로 기록되고 수백 개가 정상이다더라도 일부 패티는 덜 익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햄버거병 논란이 퍼지자 한국소비자원은 맥도날드를 비롯한 시중의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와 편의점에서 햄버거 38종을 수거해 미생물 검사를 벌였다. 맥도날드는 "소비자원이 신뢰성 없는 조사 결과를 무단 발표할 경우 자사의 명예와 신용이 침해될 수 있다."며 정보 공개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소비자원의 손을 들어줬다.



▲ 12월 1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국소비자원 관계자가 편의점 판매 햄버거 3종, 14개 제품 비교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8월 10일 소비자원은 햄버거 세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6개 업체의 24개 햄버거 제품과 편의점 5개 업체 1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조사 대상 중 유일하게 맥도날드의 불고기버거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의 3배 이상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햄버거병 논란에 이어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자 맥도날드는 햄버거병 논란이 불거진 지 두 달 만에 공식 사과를 표명하고 문제가 된 불고기버거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햄버거병에 관한 검찰 수사 결과는 해를 넘겨 2018년 2월 '증거 부족'으로 결론 났다. 검찰은 맥도날드 햄버거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맥도날드와 임직원을 불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가 한국맥도날드에 대량으로 납품된 사실을 적발하고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를 불구속기소 했다.

## ■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시행

여행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관광공사가 마련한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이 본격 시행됐다. 이 표준안은 그동안 상품 가격, 선택 관광, 쇼핑 등 국외여행 패키지상품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이 불만으로 제기해 온 사항들을 개선한 것이다.

개선 사항은 ▲선택 관광 미선택 시 대체 일정의 부정확한 표현 제한 및 대체 이동방법 명시를 통한 자유로운 선택 보장 ▲쇼핑 정보의 정확한 제공(정보 위치 개선, 쇼핑 횟수·품목 확정 명시) 및 반품·환불 관련 책임 회피성 표현 제한 ▲취소 수수료 특별약관 적용 시 안내표시 개선 및 소비자 동의절차 명시 ▲여행 일정 변경의 명확한 안내 및 동의절차 명시 ▲핵심 정보 일괄 표시 등이다.



▲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소비자원은 불만을 제기해 온 사항들을 개선한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5월 31일 밝혔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모습.

표준안 참여 여행업체는 내일투어, 노랑풍선, 레드캡투어, 롯데관광개발, 모두투어, 세종, 여행박사, 온누리투어, 웹투어, 인터파크투어, 자유투어, 참좋은여행, 투어2000, 하나투어, 한진관광, 현대드림투어, KRT 등 총 17개사다.

이 여행사들은 자사 홈페이지에 정보 제공 표준안 참여마크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은 이 마크를 보고 패키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소비자원과 관광공사는 연 2회(6월, 10월)에 걸쳐 인기 여행지의 온라인 상품 정보를 대상으로 이행 실태를 조사하고 이행 수준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1회 시정 요구 후 2회 미달 시 참여마크 사용을 취소한다.

최근 몇 년간 해외여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도 계속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서 2010~2016년 7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여행 소비자 불만 건수는 총 9만2천462건이었다. 특히 2010년 7천

295건에서 2016년 1만8천457건으로 153%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출국자 수 증가율 79.2%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소비자 불만 유형으로는 계약 해제 거부가 5만9922건(55.8%)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내용 임의 변경 1만3천355건(14.6%), 정보 제공 미흡 5천233건(5.7%), 결항·연착 등 운항 지연 4천693건(5.1%) 순이었다.

## 재외동포·다문화

### 재외동포

#### ■ 개요

2017년은 러시아 연해주에 거주하던 고려인이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지 80년이 된 해였다.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을 기억하고 위로하는 행사가 잇따라 열렸고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고려인과 러시아 동포 180여 명을 초청해 동포간담회를 개최했다.

2016년부터 이어진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어려움을 겪던 중국동포들은 10월 31일 한중 사드 갈등 합의문 발표 이후 양국 관계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자 환영과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부가 7월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10번째 과제로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와 재외동포 지원 확대'가 선정됐다.

세계한인무역협회(OKTA)는 전국 13개 테크노파크와 협력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수출새싹기업 지원 사업'에 나서 성과를 거뒀다. 이 밖에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에 처음으로 외교관 출신이 아닌 재외동포 출신이 임명됐다.

#### ■ 재외동포 179개국에 743만 명 거주

외교부가 발표한 '2017 재외동포 현황'을 보면, 2016년 12월 31일 현재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는 743만664명이고 조사 대상 194개국 가운데 15개국을 제외한 179개국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중국 254만8천30명(34%), 미국 249만2천252명(33.7%), 일본 81만8천626명(11%), 캐나다 24만942명(3.2%), 우즈베키스탄 18만1천77명(2.5%), 호주 18만44명(2.5%) 순이었다. 내전 중인 시리아와 소말리아에는 한 명도 살지 않았고 유럽 산마리노는 동포가 단 한 명(시민권자)만 사는 '나 홀로 거주국'으로 확인됐다.

거주 자격별로 보면 재외동포 가운데 440만1천816명(62.77%)은 거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고 재외국민에 해당하는 영주권자, 일반체류자, 유학생은 각각 112만2천161명, 119만1천758명, 29만16천757명으로 전체의 37.23%였다.

연도별로는 1986년 200만 명을 돌파하며 2007년 704만4천716명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9년 682만2천606명으로 한때 감소세로 돌아선 뒤 2011년 다시 700만 명을 돌파했다.